

01. ④ 02. ⑤ 03. ① 04. ② 05. ③ 06. ④ 07. ④ 08. ③ 09. ① 10. ⑤
11. ③ 12. ⑤ 13. ⑤ 14. ① 15. ① 16. ④ 17. ⑤ 18. ② 19. ② 20. ③

1.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

정답 해설 : 제시문에서는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.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. **정답 ④**

[오답피하기]

-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정치로 본다.
-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면 부서 간 통폐합을 둘러싼 회사 내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로 본다.
-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.
-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면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.

2.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

정답 해설 :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,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. 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.
-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.
-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.
- ④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.

3.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

정답 해설 :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과반수 정당인 A당이 아니라 B당이므로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. ①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 인물이다. **정답 ①**

[오답피하기]

- ②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.
- ③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.
- ④ 내각 불신임권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는 견제 수단이다.
- 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탄핵 소추권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고,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.

4.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

정답 해설 : A는 근대 민주 정치, B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. ②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제가 실시되었는데, 이는 자기 지배의 원리에 기초한다.

정답 ②

[오답피하기]

- ① 현대 민주 정치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.
- ③ 추첨, 운번제를 통해 모든 시민의 공직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.
- ④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이다.
- ⑤ 입헌주의에 기반한 다수의 지배를 추구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이다.

5. 정치 참여 집단 이해

정답 해설 :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이익 집단, B는 시민 단체이다. ③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.

정답 ③

[오답피하기]

- ① 정치 참여 집단인 이익 집단, 시민 단체, 정당 등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. 산출을 담당하는 것은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이다.
- ②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다.
- ④ 이익 집단,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.
- ⑤ 이익 집단,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.

6. 헌법 심판 이해

정답 해설 : ④ 헌법 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,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, 피해의 최소성,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

정답 ④

[오답피하기]

- ①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자유권이다.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권리는 청구권이다.
- ② 갑이 청구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.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.
- ③ 갑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.
- ⑤ 헌법 재판소는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.

7.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

정답 해설 :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, B는 대법원, C는 헌법 재판소이다. ④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. 정답 ④

[오답피하기]

-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.
- ②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.
- ③ 국회는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- 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.

8.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

정답 해설 : ③ 법원은 갑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로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. 정답 ③

[오답피하기]

- ①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.
- ② 갑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.
- ④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.
- ⑤ 을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9.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

정답 해설 :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(가)는 국민 주권주의, (나)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. ① ‘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.’는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한 헌법 내용이다. 정답 ①

[오답피하기]

- ②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유 재산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는다.
- ③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직접 민주제, 간접 민주제 채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.
-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원리이다.
-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.

10. 선거 결과 분석

정답 해설 : 주어진 자료에 따른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현행	1안	2안
갑	4표(당선)	28점	결선, 4표
을	3표	33점(당선)	결선, 7표(당선)
병	2표	25점	
정	2표	24점	

- ⑤ 1안과 2안에서 선출되는 대표자는 모두 을이다. 정답 ⑤

[오답피하기]

- ① 현행 제도에서 갑이 4표로 당선되므로 7표는 사표가 된다.
- ② 1안에서 선호 순위 합계 점수가 높은 후보자부터 나열하면 '을 > 갑 > 병 > 정'이다.
- ③ 현행 제도, 1안 모두 한 번의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한다.
- ④ 현행 제도는 상대 다수 대표제, 2안은 절대 다수 대표제이다.

11.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

정답 해설 : ③ 거래 상대방은 을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없다.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해야 한다. **정답 ③**

[오답피하기]

- ①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A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A는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.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어야 한다.
- ④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속임수로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.
- ⑤ 갑, 을과 달리 병은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12. 소비자 권리 구제 절차 이해

정답 해설 : ⑤ 한국 소비자원이 B회사에 합의를 권고하더라도 B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합의 권고가 거부되면 소비자, 회사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내용 증명 우편은 기재된 내용의 법적 사실이 확정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.
- ② 갑은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지 바지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할부 거래, 전자 상거래는 모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.
- ④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 상관없이 민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13. 주택 임대차 계약 이해

정답 해설 : ⑤ 을이 A 은행의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○○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은 매각 대금에서 A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.
- ②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③ 확정 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것이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A 은행이 저당권자, 병은 채무자가 된다.

14. 형사 절차 이해

정답 해설 : ① 수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물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압수가 가능하다. **정답 ①**

[오답피하기]

- ② 갇은 기소 전에는 피의자 신분이다. 기소 후에 피고인이 된다.
- ③ 기소 유예 처분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.
- ④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이다.
- 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.

15.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이해

정답 해설 : 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. **정답 ①**

[오답피하기]

- ②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. 구속 영장 발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.
- ③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한다.
- ④ 보석 허가는 형사 재판 도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검사가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- ⑤ 집행 유예 판결은 유죄 선고이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16. 특수 불법 행위 이해

정답 해설 : ④ 갇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이 없지만, 갇의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. **정답 ④**

[오답피하기]

- ① 갇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갇의 부모는 지시 여부와 상관 없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.
- ③ 만약 A에게 자전거를 방치한 책임이 있더라도 갇의 부모의 책임이 무조건 없다고 볼 수는 없다.
- ⑤ 갇과 갇의 부모가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.

17. 유언과 상속 이해

정답 해설 : ⑤ 법정 상속 2순위인 무는 법정 상속 1순위인 병과 정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,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 **정답 ⑤**

[오답피하기]

- ① 갇의 사망으로 을과 병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.
- ② 사례에서 법정 상속인은 을, 병, 정이다.
- ③ 을의 법정 상속액은 9억 원, 병과 정의 법정 상속액은 각각 6억 원씩이다.

④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/2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은 병보다 많은 유류 분액을 받게 된다.

18.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

정답 해설 :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안전 보장 이사회, B는 총회,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. ② 총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.

정답 ②

[오답피하기]

-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만 거부권을 가진다.
-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다룬다.
-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의 강제 이행을 위해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.
- 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.

19. 국제법과 국내법 비교

정답 해설 : ‘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’은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에 해당하고, ‘난민 법’은 우리나라의 국내법 중 법률에 해당한다. ㄱ.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권 은 대통령에게 있다. ㄴ. 조약과 법률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. **정답 ②**

[오답피하기]

- ㄴ. 국회를 통과한 조약은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- ㄷ.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지만, 국내법인 법률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있다.

20. 정당 제도 특징 이해

정답 해설 :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갑국의 방식별 정당 제도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t 시기	t+1 시기
방식 1	양당제	다당제
방식 2	양당제	다당제

- ㄴ. <방식 2>를 적용하면 갑국의 유효 정당 지수는 t+1 시기 약 2.82, t 시기 약 2.41이다. ㄷ. <방식 2>로 판단하면 t+1 시기는 다당제, t 시기는 양당제이다. 다당제 에서 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이 높다. **정답 ③**

[오답피하기]

- ㄱ. <방식 1>로 판단하면 t 시기는 양당제, t+1 시기는 다당제이다. 다당제에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.
- ㄴ. <방식 1>로 판단한 t 시기는 양당제, <방식 2>로 판단한 t+1 시기는 다당제이다.